

# SmartWhistle

## 윤리경영 Newsletter 2018년 10월호

### 1. 최근 동향 및 소식

- 권익위, 카타르에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제도' 전수
- 세계 최대 규모 '국제반부패회의', 2020년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 박은정 권익위원장,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로 뽑혀
- 기재부, '3개과 신설' 확대개편...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 주목

###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오뚜기] 갯두기가 된 오뚜기, 오뚜기의 성장 비결

### 3. 청렴 위반 사례

- 상사의 고교동창에게 수의계약 특혜 제공
- 승진대상자에 대한 시험 준비 특혜 제공

### 4. 지식마당

- [반부패 국제 동향] 유엔반부패협약(UNCAC)

### 5. Quiz

###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 최근 동향 및 소식

### 1. 권익위, 카타르에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제도' 전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카타르에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투명성·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은 2011년 카타르 국왕 직속으로 설립된 부패예방 정책기관으로,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유엔 반부패협약상 부패방지 전담기구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작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당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장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지표 개발 등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3년간 투명성·청렴성 분야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청렴도평가 지표와 평가체계 개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30/0200000000AKR20181030030800001.HTML?input=1195m>

### 2. 세계 최대 규모 '국제반부패회의', 2020년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이 2020년에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개최국으로 최종 결정됐다.

IACC는 2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회의 폐막식에서 대한민국을 제19차 회의 개최국으로 공식 선언했다.

IACC는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2년에 한번 개최하는 국제반부패회의로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의 국제 반부패 연대의 장이다. 여기에는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반부패 전문가 2천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 반부패정책의 통제탑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IACC 차기 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IACC는 제19차 회의 개최국을 대한민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http://newsbrite.net/sub\\_read.html?uid=18923&section=sc40](http://newsbrite.net/sub_read.html?uid=18923&section=sc40)

## 최근 동향 및 소식

### 3. 박은정 권익위원장, 국제반부패 아카데미 이사로 뽑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ACA) 이사로 선출됐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7차 IACA 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임원으로 선출됐다.

IACA는 유엔 반부패협약의 효율적인 이행과 각국의 부패예방·척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분야 교육 및 훈련과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지난 2010년 10월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설립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74개 당사국(3개 국제기구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반부패 교류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그룹을 대표해 오는 2019년 11월부터 5년 임기의 이사로 선출됐다. 이사는 총 11명으로 IACA의 전략·정책·지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박 위원장은 이사직 수락연설에서 “IACA가 설립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반부패 전문가의 역량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법학교수이자 인권단체 활동,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IACA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idxno=218589>

### 4. 기재부, '3개과 신설' 확대개편... 윤리경영과·공공혁신과 주축

공공정책국 조직개편 현황



기획재정부가 공운법 개정 후속조치와 경제구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운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 및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혁신심의관 및 2개과(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를 신설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등을 지원하며,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게 된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8000111>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오뚜기] 갯뚜기가 된 오뚜기, 오뚜기의 성장 비결

#### 1. 기업 소개

오뚜기그룹의 모기업으로 종합식품업체로 1969년 풍림상사로 창립한 뒤, 1996년 지금의 (주)오뚜기로 상호를 바꾸었다.

오뚜기는 1969년 회사 설립과 함께 인도 요리인 '카레'를 분말 형태의 '오뚜기 즉석 카레'를 1호 제품으로 출시했다. 1981년 국내 첫 즉석요리 '3분 카레'로 가정간편식 시장을 개척했고, 오뚜기 3분 카레는 '가정간편식'의 국내 원조가 되었다. 케첩, 마요네즈는 원래 외국 소스지만 두 소스 모두 오뚜기가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서 개발해 판매했다.

오뚜기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업소 전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등 제품만 30여 개, 가정간편식으로 2016년부터 연매출 2조원을 돌파한 기업이 되었다.

오뚜기의 국내 사업장은 안양공장, 대풍공장, 삼남공장 등 3곳, 해외 현지법인 생산공장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에 있다.

#### 2. 모든 직무가 중요한 기업

과자, 라면, 고기, 반찬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고객들에게 권해 구매를 유도하는 시식 직원들 대부분은 경력이 단절된 중년여성이자 비정규직이다. 기업 입장에서 고도의 업무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현장의 홍보 사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게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

故 함태호 회장의 경영철학이다. 2016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인력의 1%에 불과하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 1% 비정규직도 시간제 주부사원이라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파트타임 형태로 채용해, 원하는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오뚜기의 채용정책은 명확하다.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직책은 없다'는 것이다.

#### 3. 정직한 상속세 납부

외국 언론들은 한국형 기업 형태를 가리켜 '재벌(Jaebul)'이라고 표기한다. 국내 대기업들 특유의 족벌 경영 체제를 표현하기 위한 마땅한 단어가 없는 것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을 이끈 재벌체제는 여러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편법 상속 문제다. 법적으로야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일반소비자 즉 국민의 시선에는 곱게 비칠 리가 없다.

상속/증여세 법에 따라 오뚜기는 1,5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함영준 회장은 5년에 걸쳐 성실히 분할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 4. 협력업체들이 더 칭찬하는 기업

국내 여느 대기업들이 그렇듯, 오뚜기 역시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오뚜기의 협력업체들의 근속연수가 높고 계속해서 최신의 기계들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뚜기의 특별한 경영철학이 있었다.

##### “아무리 어려워도 납품 대금만큼은 제 때, 제 값으로 지급하자”

원청업체인 오뚜기가 납품대금을 성실히 치러준 덕분에 협력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덕분에 근로 환경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기업은 저마다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윤리경영 실천 사례

서로의 역할에 정당한 값을 지불한다면, 낙수효과, 지속가능경영, 초과이익공유 같은 인위적인 이익의 재분배는 필요치 않은 것이다.

### 5. 끊임없는 사회공헌



2016년 9월, 故 함태호 회장의 장례식장에는 유독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오투기의 후원으로 심장 수술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이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새 심장을 기증받았다. 또한, 석봉토스트가 노숙자들에게 하루 100개의 토스트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된 故 함태호 회장은 이후 10년간 토스트에 들어가는 모든 소스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석봉토스트 창업주인 김석봉 씨가 본인의 자서전을 쓰면서 알려졌는데, 오투기의 숨겨진 미담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오투기 선물세트 임가공 위탁, 오투기 제품 기증, 오투기 임직원 봉사활동, 오투기 물품 기증 캠페인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공헌하고 있다.

### 6. ‘갯뚜기’가 보여준 윤리경영의 경쟁력

예산으로만 따지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오투기보다 훨씬 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투기가 갯뚜기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실천해 온 윤리경영 때문이다. 기업윤리는 때로 현실과 괴리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노력하는 기업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오투기의 미담을 정리한 글을 여러 커뮤니티로 퍼 날랐고, SNS를 중심으로 전개된 구매운동의 성과는 2017년 라면시장 점유율 5% 상승을 일으켰다. ‘착한 기억’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소비자의 실행행사가 현실에서 빛을 본 것이다. 뉴 노멀 시대의 소비자들은 적은 수입과 불안한 고용 기조에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윤리경영이야말로 뉴 노멀 시대를 꿰뚫는 경쟁력인 것이다.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기업, ‘[㈜오투기](#)  
 국민권익위원회 윤리연구소, ‘[갯뚜기가 된 오투기, 오투기의 성장 비결](#)’  
 오투기 공식 홈페이지, ‘[㈜오투기 윤리강령](#)’

오투기 윤리강령
하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의 요구나 제공을 받지 않는다.
하나, 건전한 상식을 넘는 접대 및 향응을 받지 않는다.
하나,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편의제공(교통, 숙박 등)을 받지 않는다.
하나, 임직원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알리거나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나,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금전대차, 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를 하지 않는다.
하나, 업무 또는 사적인 행사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 편의제공 등을 받지 않는다.
하나,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한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
하나, 회사의 예산 및 자산, 정보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청렴 위반 사례

### 1 상사의 고교동창에게 수의계약 특혜 제공

모 공직유관단체 A과장은 외부전문가로 초청되어 직원교육시간에 특강을 할 예정인 B교수가 소속기관장 C의 고교 동창임을 알게 되자, 그 해 교육훈련장비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B로 특정하여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함

시사점 :

- ① 공무원 A과장은 교육훈련장비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에 있어 학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를 위반함

####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승진대상자에 대한 시험 준비 특혜 제공

모 지방자치단체 A국장은 자신의 대학 후배인 부하직원 B주무관이 승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가 미진함을 알게 되자 충분히 승진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개월간 B주무관이 자신의 업무를 보지 않고 승진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배려해 줌

시사점 :

- ① A국장이 자신의 대학후배인 B후배에게 학연을 이유로 담당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승진시험에만 준비할 수 있게 배려한 행위는 특혜로서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식마당

### [반부패 국제 동향] 유엔반부패협약(UNCAC)

#### 1. 개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또는 유엔 부패 방지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부패 방지를 위한 다자조약이다. 한국은 2003년 12월 10일 서명하여, 2008년 3월 27일 비준하였다. 협약의 목적은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까지 유엔 부패 방지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총 140개이며, 당사국은 총 183개의 국가가 있다.

#### 2. 유엔 반부패협약 이전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

원래는 1995년도에 설립된 World Trade Organization을 통해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를 방지해 무역체제내의 공정한 경쟁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개도국 내무 부패문제 해결보다는 무역, 국제입찰 등과 관련한 부패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결국 반부패 라운드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대신 OECD와 UN 등에서 논의를 주도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한국을 포함한 여러 신흥공업국이 국제시장에 참여하게 되자 선진국(미국 등)은 신흥공업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뇌물제공 없는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범죄로 규정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 OECD 뇌물방지협약마저도 뇌물제공 문제 관련 협소한 주제만을 다루고 있어, 예방, 범죄화·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반부패와 관련된 종합

적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전 지구적인 국제규범이 필요했다. 이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용될 단일의 반부패 국제규범을 마련할 “UN반부패협약”을 체결한다.

2000년 12월 UN총회는 분산되어 있던 현존 반부패 국제협약을 통합하여 보편적인 협약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동협약 서명일인 12월 9일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해 오고 있다.

#### 3. 유엔반부패협약의 주요특징

##### I.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의무화

-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 처벌 못지않게 부패 예방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의 유무
- 제5~6조, 제7~13조 등을 규정

##### II. 부패의 범위를 공공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그 동안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부패행위를 논하였다면 이 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을 고려
- 제12조, 제21~22조

##### III.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 부패를 정의하면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이 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중

## 지식마당

### IV.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 강화

-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 처벌 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
- 제44~46조, 제48~50조, 제60~61조

### V.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 마련
- 이전에는 국가의 재량에 따라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없이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 4. 유엔 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 채택

제3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때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협약 이행점검체계가 합의되었다.

이행점검체계 주요 합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점검 시기 및 주기
  - 2010년부터 5년을 주기로 2차례 걸쳐 1차 점검과 2차 점검을 실시
  - 1차 점검 기간중에는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제4장(국제협력), 2차 기간 중에는 제2장(예방조치), 제5장(자산회복)을 검토
- 점검국 수 및 선정방법
  - 이행점검은 2개국에 의한 상호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점검국은 제비뽑기 방식에 의해 선정하며, 점검국과 피점검국 간 교차 평가는 배제함

- 정부 전문가 선정 및 점검 횟수
  - 각 당사국은 이행점검 과정에 참여할 정부 전문가를 선정해야하며, 전문가는 15인까지 지정가능함
  - 점검 주기 내에 각 당사국은 피점검국으로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국으로서 최소 1번, 최대 3번의 점검을 수행해야 함
- 점검 자료
  - 협약 이행에 관한 원활한 정보 수집을 위해 포괄적인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사무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 종료 후 2개월 내에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여 당사국에 배포
- 점검방법
  - 점검국은 피점검국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서면조사를 실시
  - 서면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피점검국의 동의하에 방문실사 또는 비엔나 유엔본부에서의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점검 결과 보고
  - 점검국은 피점검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요약문'을 유엔 6개 언어로 번역하여 이행점검그룹에 제출
- 예산 조달방안
  - 이행점검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유엔의 정규 예산에서 조달하고, 실사방문, 공동회의, 전문가 훈련에 소요되는 자금은 조건없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국민권익위원회, “UN반부패협약개요”

국민권익위원회, “UNITED NATIO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유엔 반부패 협약”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정책 UN서 소개”



## Quiz

- 다음 중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옳은 것은?
  - ① 뇌물수수법
  - ② UN반부패협약
  - ③ OECD뇌물방지협약
  - ④ 해외부패방지법
- 다음 중 다음중 “국제 반부패의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2003년 12월 1일
  - ② 2000년 12월 9일
  - ③ 2008년 3월 27일
  - ④ 2002년 12월 25일
- 다음 중 UN반부패협약의 주요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부패의 범위를 공적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장
  - ②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 ③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 ④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자율화
- 다음 중 UN반부패협약 이전에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협약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① OECD뇌물방지협약	② 뇌물수수법
③ 해외부패방지법	④ 링컨법

##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② UN반부패협약
2. 답 ② 2000년 12월 9일
3. 답 ④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자율화
4. 답 ① OECD뇌물방지협약

## 관련 행사

### 1. Responsible Business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8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다섯 가지 분야(기후 변화 대응, 도시화, 인권, 식량&영양, 순환경제)의 실용적인 해결책 논의

주최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일시 : 2018년 10월 10일 ~ 10월 12일  
 장소 : Marina bay sands, Singapore

SHAPING THE WORLD IN 2030:  
 PARTNERSHIPS FOR SDG ACTION

The Responsible Business Forum 2018 will deliver practical solutions across five areas critical to the attainment of the SDGs. Climate action, Urbanisation, Circular economy, Human rights, Food & nutrition Each workstream will incorporate inputs on the cross-cutting themes of business, youth, gender, technology, finance and policy, and seek practical, innovative and collaborative approaches to these most compelling issues through a new 'laboratory format'.

<http://www.responsiblebusiness.com/forum/responsible-business-forum-sustainable-development-2018/type/location/>

### 2. World Ethical Data Forum 2018



친환경적 비즈니스 혁신 촉진을 목표로 저탄소 사업 및 기술들을 전시하는 쇼케이스 및 토론 진행

주최 : Business Green Leaders  
 일시 : 2018년 10월 16일  
 장소 : London, United Kingdom

Highlights for the 2018 Edition:

- √ Researched programme
- √ Panel discussions
- √ Keynote sessions
- √ Cutting-edge case studies
- √ Networking opportunities
- √ On stage interview

<http://events.businessgreen.com/leaderssummit>

##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